

#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10호 2001년 2월 1일 발행인 조동성

## ▶현대일본연구

### 「외국인 노동자」에서 「이민사회 일본」으로

선원석 (拓植大學 강사)

20세기의 세기말,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定住化)라는 현실 앞에 「이민사회 일본」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이민」, 「마이너리티(minority)」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붐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걸친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과 '정주화'라는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버블'이라 불리는 경기 상승 국면기에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각 분과 학문 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룬 배경에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가 중요한 자극제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전후의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라는 환경변화를 연구대상으로 수용한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연구에서 출발했다. 이 작업은 '외국인'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면에서 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제 확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자'라는 측면에 주목한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이 새로운 노동력 집단이 일본 노동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루트와 취업 경로, 고용과 취업형태에 관한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다음 세 가지가 대표적인 논점으로 부각되었다.

첫째는, 출생률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강화시켜 저변 노동시장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셋째는, 특히 단순 미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자칫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감퇴시키거나 업종전환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산업구조 전체의 변화와 조정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런 논점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이민의 역사가 일본보다 앞선 서구 선진 공업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문제들은 '노동자'라는 공통의 틀에 「버블 경기의 붕괴」, 「초 고령화 사회」, 「급격한 산업구조 조정국면」이라는 일본의 현재 상황이 가미된 논점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다음에 논의 할 '외국인'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은 지극히 일본적 배경에 바탕을 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란 측면에 주목한 연구를 다소 거칠게 정리하자면, 과연 일본이 이민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무수의 다양한 논의가 있고 그 논의는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외국

인 노동자를 일본 사회가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일본 사회가 외국인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는 가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대응의 범위를 넘어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은 사회구성의 기본 요소이며, 그러므로 그 범위를 정하는 원리와 근거는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대 국가 형성 이후, '시민권'이나 '국적'은 지리적 국경과 더불어 한 사회를(여기서는 국가) 다른 사회와 구별 짓는 가장 전형적인 인위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온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계기로 촉발된 논의가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발전하기까지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환경변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이다. 취업기회가 감소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더 나은 일거리를 찾아 다른 외국으로 떠나는 게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일반적 현상이다. 실제로 일본도 버블 붕괴 이후 경기 후퇴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쳤고, 취업기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계속 체재하는 정주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정주화 현상은 몇 가지 대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그 대부분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초과 체재자(overstayer) 수는 1992년 이후 약 28만명 전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 중 본국을 여러 차례 왕복한 적이 있는, 소위 정주 예비군이라 불리는 리피터(repeater)의 비율의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유입 외국인 노동자가 종래의 단신자 중심에서 가족 동반자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상 등은 외국인 정주화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주화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정주화 현상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주장하는 쪽은, 정주자의 상당 부분이 남미 출신의 일본계라는 것에 그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30만 명을 헤아리는 일본계 주민은 비자와 취로 등에서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어 다른 외국인과는 법적 지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일본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주화로 보는 쪽은, 일본계가 법적 지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해도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나, 일본 사회와의 문화적 갈등 등은 다른 외국인 집단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정주화에 대한 현실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주화 현상이라는 현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논의를 고용 노동자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민으로서의 외국인'이라는 사회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회학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은, 정주화를 배경으로 한 외국인과의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측면들을 연구 대상으로 그 연구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에스닉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언어와 교육문제, 지역사회에서의 갈등과 적응,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자원봉사자 같은 개별 당사자의 대응과 변용, 인권과 차별 문제 등은 이러한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앞서 지적한 일본 사회의 성격과 이민사회 일본에 대한 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국경을 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은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등이 존재하는 한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는 사람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장려나 제한과는 무관한 초국가적, 탈 국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작금의 IT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물자와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함께 주권국가의 집합체로서의 국제사회라는 인식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 국경을 넘는 이동이 당해 주권국가에 의해 강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출입국 관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국가에 의한 국제적 이동에 대한 개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이 다름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런 현실은 사람의 국제적 이동과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이중적 현실의 모순이 외국인 노동자에서 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1989년과 올해, 두 차례

에 걸쳐 개정 실시된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통칭 입관법)은 국가 개입의 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보여진다. 심지어 올해 개정 실시된 입관법에는 「초과 체재죄」가 신설되어 재류기간을 초과한 체재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존」, 「공생」의 다윈주의가 이민사회 일본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편에, 사람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국가 개입의 강화라는 현실의 정책적 조건간의 알력은 앞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과 정주화라는 환경변화에서 촉발된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 문제는 이제 일본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되었다.

## ▶ 포럼소개 5

# 일본의 국제화 연구회

송주명(한신대 국제사회학부 일본학과)

## 1. 연구회 취지

1980년대 이래 세계 GDP의 1할 이상을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거센 국제화 압력에 봉착하게 된다. 일본에게 이 국제화 압력은 거대한 국내적 구조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대외정책이 국제화 압력에 반응(reactive)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가, 혹은 '전략적으로(strategically) 대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가에 따라 국내구조 전환의 양상 및 정도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국제화 압력은 1955년을 계기로 성립한 종래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 즉 '55년 체제'의 변용(變容)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회는 1980년대 이후 일본이 직면한 구조적 전환의 기본특징과 방향을 국제화의 압력과 국내적

## 《參考文獻》

- 井口 泰, 『國際的な人の移動と勞務市場』, 日本勞研究機構, 1997.
- 伊豫谷登士翁·梶田孝道 編, 『外國人勞務者論』, 弘文堂, 1992.
-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名古屋大學出版會, 1992.
- 駒井 洋 著, 『移民社會日本の構想』, 國際書院, 1995.
- 駒井 洋 編, 『日本のエスニック社會』, 明石書店, 1996.
- 佐野 哲, 『ワーカーの國際環流』, 日本勞務研究機構, 1986.

구조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1995년에 조직되었으며, 1999년까지 3~4년에 걸쳐 「일본의 국제화와 구조전환」이라는 주제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향후의 연구주제로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일본모델이 가지는 보편성과 한계」를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회는 단순한 연구프로젝트의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일본연구자들을 연구회 네트워크로 조직화하여,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수준 높은 연구방향의 수립을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종래 추진해 오던 포럼의 틀을 인적 구성 면에서 확장하고, 독회 및 확대 학술회의를 보다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출판된 중요 연구업적들을 엄선하여 국내에 번역 소개하는 작업에도 힘쓸 것이다.

## 2. 인적구성 및 전문분야

본 연구회는 전문성에 입각한 학제간 종합연구를 추구하는 만큼, 그 구성 또한 필수적 학문분야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달중(張達重),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일본내정(중앙)

김장권(金長權), 서울대 국제지역학 교수, 일본내정(지방정치)

이원덕(李元德), 국민대 지역학부 교수, 일본외정(외교)

송주명(宋柱明), 한신대 국제사회학부 교수, 일본내정(정치경제·대외경제정책)

이종구(李鐘久),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일본사회(노사관계)

한경구(韓敬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문화(기업문화)

김광옥(金光玉),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역사(근현대사)

진창수(陳昌洙),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일본내정(정치경제)

김용복(金容福),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일본내정(정치경제)

하중문(河琮文), 한신대 국제사회학부 교수, 일본역사(근현대사)

손열(孫冽),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내정(정치경제)

## 3. 연구회의 작업방향

### (1) 연구주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일본모델이 가지는 보편성과 한계: 변모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일본의 적응과 21세기 한국에 대한 함의

### (2) 연구내용

본 연구회는 학제간 협동연구를 통해, 1980년대까지 일본성공의 원인으로 간주되던 일본형 사회모델 혹은 시스템이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적 신자유주

의 공세와 경제위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세계적 압력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수정되어 나갈지, 그리고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의 행보에 의해 크게 영향받아 온 한국의 장래에 그러한 변화 및 수정이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차기포럼은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1)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서 일본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2) 일본모델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진화양상을 겪어 왔는가? (3) 1980년대 이래 '일본모델'이 더 이상 모델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내재적, 외재적 원인은 무엇인가? (4) 향후 일본모델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가? 전면적인 변화를 통한 서구사회로의 수렴인가, 아니면 부분적 변화를 수반한 일본적인 제도의 적응인가? (5) 이러한 변화들은 일본사회를 암묵적으로 하나의 모델—발전지향점으로—로서 인식해왔던 한국의 미래의 발전방향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그리고 일본모델의 변화에 따라 최인접국인 한국은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적 정책방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연구의 기본구성은 크게 네 분야로 구별되지만, 통합된 목표 하에서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각분야의 논의결과가 종합적이고 완결성을 갖는 사회과학적 학제연구의 틀로 결합된다. 우선 기본적인 구성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본모델의 정의와 그 형성 및 변화의 역사적 맥락 (2) 자민당 일당우위 및 정관계 복합체적 일본정치모델의 변화 (3) 일본모델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온 '일본적 노사관계'론의 한계와 변화전망 (4) 세계질서 속의 일본의 위상변화와 새로운 대외관(안보 및 대외경제정책)의 본격화. 본연구는 상기의 분야들에서 나타나는 종래 일본모델의 일정한 특질들이 일본사회,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및 세계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조건 속에서 소실, 변형, 적응 혹은 재생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세기 일본사회의 총체적 상을 그릴 것이다.

본 연구회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일본모델의 한계와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내재적 요인과 국제적 압력(외압)을 다같이 중시하는 분석을 해나갈 것이다. 즉 제도의 내재적 연속성과 진화를 강조하는 정치학의 역사적 신제도주의적(historical neo-institutionalist) 분석이나 경제학의 비교경제제도 접근의 분석방법을

활용하면서도, 변화의 국내적 과정과 국제적 요인의 연계를 강조하는 연계분석의 방법도 동시에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포럼은 일본모델의 변화에 대해 '일본 몰락론', 서구사회로의 당위적 '수렴론'에서 주장되는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재편에 대한 이

미지보다는, 내재적 필요성과 세계적 압력들에 의한 연속적인 변화의 누적과 제도의 점진적 수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적응 혹은 조정(adjustment)의 이미지를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 미국의 일본연구동향

### 미국에서의 일본사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윤병남(서강대 사학과)

미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사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나라이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방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사 연구 전반에 대한 개괄과 아울러 각각의 시대와 주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국의 일본사 연구는 학제적인 연구와 공동연구가 활발하여 그 결과물의 성격을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가능한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시대면에서나 주제면에 있어서 모든 연구를 망라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이기에 우선 근래에 새롭게 이루어진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연구가 미국 학계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것이 일본과 한국 학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1990년대라는 시기를 설정하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언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서술의 구체적 방법은 각 시대사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나아가 분야사와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990년대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것은 조사의 편

의를 위한 임의적인 것이었지만, 이 시기의 일본사 연구에 전 시기와 비교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의의가 존재한다.

첫째, 캠브리지 일본사 전6권의 완간이 미국의 일본사 연구에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반 역사의 스탠다드 버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캠브리지 시리즈의 성과와, 아울러 프로젝트의 착수부터 완간까지 소요된 20여년간의 세월과, 편집자들과 미국의 주요 집필자들의 학계 내의 비중,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한 이 프로젝트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캠브리지 일본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미국의 일본사 연구를 개관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일본사 연구의 경향과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고, 동시에 이 시리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반응을 통해서 이 시리즈에 수렴될 수 없었던 학계의 다른 움직임과 목소리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자의 세대교체의 측면에서 1990년대가 지니는 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내의 대표적인 일본학 센터가 된 주요 대학을 무대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며 오랫동안 학계를 주도했던 전후 1세대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이들로부터 지도를 받은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의 학계 진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대교체가 연구자들의 역사적 관점과 방법론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

져왔고, 또한 그것이 연구결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어떤 특정의 경향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 환경, 생태계, 질병, 일상 생활, 여성, 성생활 등의 주제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이들 주제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다수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또한 1990년대 일본사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근대화론이 구축한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판하며 “잊혀진 전통” 즉 일본 역사와 사회에 존재한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 주목한 1970년대의 연구사의 전환에 비견될 수 있는 변화이다. 주로 유럽사와 미국사 등 인접 분야의 발전에 자극되어 1980년대부터 위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다만 사료의 제약으로 도쿠가와시대나 근대에 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연구가 사료의 제약이라는 난점을 극복하고 고대와 중세사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주로 프랑스의 해체주의 철학의 관점과 방법론을 도쿠가와 사상사 연구에 적용한 일군의 연구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대부터 시도된 이러한 움직임이 1980년대를 거치면서 그 구체적인 성과물들이 나왔고, 1990년대에는 위의 관점과 방법론을 수용한 연구자들이 증가하여 가히 사상사 연구에서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로 근대에 집중된 것으로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이 제기한 “전통의 창조” 개념을 통해서 일본의 근대적 변화를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근대화론이 전근대로부터 근대로의 단선적 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위의 관점은 근대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국민국가 창출의 과정에 국가 권력이 창조한 전통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흔히 일반적으로 일본의 전통으로 여겨지던 것들의 허구성과 이데올로기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동시에 일본 내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랜동안 행해진 일본을 특수화하려는 일련의 노력 즉 “일본인론”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전후사가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자리잡은 것도 1990년대의 연구사의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

을 것이다. 이전에도 전후사 연구가 없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점령기를 상한으로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同時代史로서 전후 일본사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몫이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역사가들이 전후 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업적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전과 전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전후시대의 종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현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전전과 전후를 단절적으로 보던 종래의 관점을 비판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에 주목하여 전전의 연장으로서 전후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후의 경제발전을 전시체제의 연장으로 보려는 관점이다. 아울러 1989년의 소화천황의 사거에 의해 촉발된 전후의 종말에 관한 논쟁 속에서 전후 시기가 하나의 역사 시대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미국의 일본학 연구가 그러한 것처럼 일본사 연구도 하나의 “성장기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연구의 관점, 방법론, 서술방식 등을 둘러싼 자기갈등과 인접분야로부터의 압력이다.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또 세분화가 이루어져서 일본사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조차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점에서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해석에 토대를 둔 일본 연구자들의 논문 중심의 연구에 흡사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일본어 능력과 사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에서 전세대에 비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를 지닌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의 출현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사 연구가 다른 지역의 역사 연구와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에 어떻게 이해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다만 방법론과 이론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이 존재한다. 일본사 연구가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수립된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보편적인 서술을 지향하고 동시에 일본

사 연구가 제시한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조정하고 수정하며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 시기의 가장 주목할만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고대·중세사 연구는 연구자 수의 절대 부족으로 아직도 다루는 시기나 주제에 많은 공백이 존재한다. 다만 전후 일세대 연구자들이 시대를 넘나들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하였고, 아울러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 몇몇 주제에 관한 주목할만한 업적이 나타났고 또 이를 둘러싼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

사무라이의 기원과 부상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논쟁은 미국과 일본의 연구를 정면에서 비판한 웨인 파리스에 의해 촉발되어 칼 프라이데이, 폴 발리 등이 가담한 것이었다. 아울러 전근대에서 사무라이의 대극점에 있었던 조정과 공가를 대표하는 천황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조앤 피콕의 고대천황제의 성립에 관한 연구와 앤드류 고블의 무사지배에 도전한 고다이코 천황의 신정에 관한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고블은 지금까지 주로 시대착오적인 시도로 평가받은 고다이코의 친정시도를 새로운 지배체제를 모색한 혁명적 시도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전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었던 경제성장과 정치적 혁신을 강조하던 종래의 전국시대 연구와 달리 그것의 파괴적인 측면을, 특별히 수도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강조한 메리 엘리자베스 베리의 연구도 주목할만한 것이다.

도쿠가와시대 연구에서는 세대교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이 다수 등장하여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콘스탄틴 베포리스의 참근교대제를 비롯한 교통사 연구, 게리 립의 도시 하층민 및 남색에 관한 연구, 필립 브라운의 가하번의 농민 지배에 관한 연구, 데이빗 하월의 북해도 어업에 관한 연구, 카렌 위겐의 내륙 교역권의 성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루크 로버츠의 토좌번의 상인의 국익사상에 관한 연구, 프렛의 막말명치의 호농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를 한데 묶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다루는 주제를 넘어서 이들의 연구에

서 공통분모를 추출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막부와 번의 지배를 상대화하고 있는 점이다. 즉 거주이전과 이동에 관한 법제적 규제 속에서 일상적으로 빌 제한 없이 행해진 농민들의 여행과 순례의 예의 제시는 농민들의 삶의 자율성과 활동영역의 광역성을 보여주고 있다. 3인의 통일정권에 의해 수립되고 강요된 것으로 여겨진 검지와 석고제와 연공수취도 법제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인들은 유교에서 자신의 생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여 그것을 대명과 무사들에게 수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견인 허만 옴스도 이러한 입장에 가담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제시하는 경제적 발전, 어업, 수공업, 농업의 발전도 근대화론의 발전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명치유신에 관한 연구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업적이 축적된 분야로, 유신을 기점으로 한 전후시대의 관계, 유신의 주도자인 사무라이의 계층적 성격, 상인과 농민의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제반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캠브리지 일본사 제5권에 의해 대표되는 유신 전후사의 연속적인 이해, 하급 사무라이의 역할의 상대화와 평민의 미약한 참여 등이 1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산발적으로 행해졌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1990년대에도 몇몇 주목할만한 연구가 있었는데, 맨 처음 언급해야 하는 연구는 하바드대학의 라이사 위 일본연구소가 주관한 명치유신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 대규모의 공동연구이다. 기성의 연구자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명치유신의 다양한 역사적 측면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였다. 대부분이 본격적인 논문이 아니라 발표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명치유신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 명치유신을 다룬 연구로 이시카와라는 지역의 관점에서 명치유신을 바라 본 박스터의 연구와 한 농촌 여성 활동가의 삶을 통해 유신의 구체적 양상을 추적한 월썰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대사에서 노동자의 성장과 노사관계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앤드류 고든과 쉘든 개론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고든은 1990년대 전반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 노동자들의 정치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 운동과 사회적 갈등이 태평양전쟁 직전까지의 일본 정치를 규정하였다고 보면서 “대정민주주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이러한 갈등 구조가 전후에 부활하여 전후의 노사관계를 규정했다고 최근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쉘던 개론은 관료에 의한 노동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관료들이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수행한 역할에 관한 연구를 내놓았다.

일본제국주의의 전개에 관한 공동연구도 1980년대 초에 시작하여 90년대 중반에 3부작의 간행과 함께 종결된 전전의 일본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였다. 이 연구는 일본의 공식적 식민지에 관해서 뿐 아니라 “비공식적 제국”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중국과 만주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의 활동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공동연구의 주도자 중의 하나였던 두오스에 의한 일본의 한국식민지화 과정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한 연구이다. 아울러 영에 의한 만주국에 관한 연구는

일본제국주의가 만주에 미친 영향 뿐 아니라 만주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 본 제국주의 연구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사는 1993년의『역사로서의 전후』 발간 이후 연구가 급속도로 축적되고 있는 분야이다. 주로 전후의 2세대 혹은 3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된 전후사 연구는 1세대의 전후사이해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부터 시작된다. 즉 전후의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전개 속에서 점령기와 일본의 새로운 국내 지배 질서의 구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상찬되던 전후의 고도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사회규범과 전후의 아이덴티티의 형성의 문제에서 보이는 통제적이고 조작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전전기의 중심적인 연구자들 중 몇몇이 전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일본연구동향: 경제분야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 경제·경영분야를 중심으로 —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

1. 들어가는 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역학 연구는 19세기 이래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를 침략하고 해당 지역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걸맞게 개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학의 이와 같은 ‘태생적 성격’은 지역학 연구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을 강제한다.

하나를 구체적인 전략/전술의 개발이라는 극히 현

실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역학 연구는 극히 실용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역학 연구가 주로 정치, 경제 등의 특정 학문에서 출발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 갔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지역학의 태생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학 연구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특정분야의 학문을 중심으로 여러 기능의 학문이 상호 학제적인 협력 관계를 쌓아 올려가는 발전경로를 밟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제연구가 가장 잘 발달될 수 있는 분야가 지역학 분야라는 것이다.

경제학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거대 이론의 틀 안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특히 제3세계에서 발생하

는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단일 이론을 바탕으로 총괄하려는 보편주의적 해석으로는 식민지나 제3세계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문간의 상호연계와 협력 속에서 식민지나 제3세계의 특수한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후진지역에서 선진지역을 연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연구할 때는 어떤 경향이 나타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진국 따라 잡기”라는 현실적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는 극히 실용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연구를 지향하게 된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 하에 빠른 시간 내에 위로부터 급속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던 한국은, 자국의 현실적인 정책 개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즉 일본 따라 잡기를 위한 “정책개발의 교훈 찾기”에 그 무게중심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구는 당면한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경영 분야에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경제/경영분야 연구는 지역학으로서의 독립적인 한 분야라기보다는 당면한 경제개발을 위한 도구학문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일본경제 및 경영상의 제현상을 한국의 정책 목표에 알맞은 형태로 선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기형적인 일본상을 만들어내 학문으로서의 일본학 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성격은 밑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양국간의 정책적 쟁점이나 ‘이식’을 염두에 둔 제도 및 정책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경영 분야 일본 연구가 아직 독립적인 지역학 연구로서 자리잡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일본 연구 분야의 단골 주제인 한일 무역불균형 문제, 한국에의 ‘이식’을 염두에 둔 산업정책 연구 및 일본적 경영의 문제 등의 연구 경향을 다루고 이어서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연구 경향의 대두와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기존의 연구 경향

한국의 일본 연구, 특히 경제·경영 분야연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책적 시사점, 다시 말하면 정책적 교훈 찾기를 위한 비교연구, 혹은 양국간의 정책 쟁

점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일본 경제가 걸어온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양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하다는 판단 하에, 서양의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 보다 실용성이 높다는 이유로 주로 한국에의 ‘이식’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 및 경영기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산업정책에 쏠린 높은 관심은 1960년대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발전이 정부주도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도입가능한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로서 일본을 상정했던 결과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민간 경제의 성장 과정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거대한 국가 발전전략 하에 국가가 특정 산업을 보호/육성한 결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에서도 일본의 경제적 성공의 원인을 둘러싸고 민간주도설과 정부주도설이 서로 대립되어 학계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지만 우리 나라의 일본 연구는 민간주도설보다는 정부주도설에 치우치면서 고도성장을 이끈 일본의 경제정책에 연구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 고도성장을 이끈 대표적인 산업정책으로는 미군정기의 경사생산방식, 1960년대의 “특정산업 진흥 임시 조치법”의 추진과 좌절, 이에 따른 통산성 주도의 간접적 산업 보호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신산업체제 및 석유위기 이후의 구조적 불황산업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정책(합리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일본 산업정책 연구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의 원인이 뛰어난 관료와 이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정부 정책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철강,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중화학 공업을 대표하는 성장 개별 산업에 대한 사례 연구와 고도성장기의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의 대표적 사례로서 산업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하나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 발전 과정을 국가 주도형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일본 연구 경향이 최근에 와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길게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짧게는 1960년대 이후의 일본의 산업화 혹은 고도성장 과정을 후진국 공업화에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자원을 “위로부터”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전략적으로 보호/육성한 결과라는 전통적인 국가주도형 분석이 후퇴하고 민간 자본의 “밑으로부터의” 성장, 즉 기업의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전략적 개입의 성격을 지니는 산업 정책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기존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연구의 중심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또 한국 경제의 페러다임이 바뀌면서 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기존의 국가-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노동의 3위 일체적 구조가 무너지면서 탈국가 개방화, 경제의 소프트화,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책 연구는 기존의 산업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규제완화나 개방 정책이 기존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연구관심이 옮겨가고 있으며 연구 대상 산업도 기존의 중후장대(重厚長大) 제조업에서 금융업 등으로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산업정책 연구와 아울러 또 다른 중심 주제는 소위 일본적 경영에 관한 연구이다. 일본적 경영, 혹은 일본 기업 시스템은 일본 경제의 성장을 내부 요인으로 해명하는 데 결정적인 해답을 제공해준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왜 가능했으며 또 두 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한데 비해 지속해서 안정적 성장이 가능했던 일본 경제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또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만성화/구조화되고 미일무역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급격한 엔고 국면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대한 만큼 저하되지 않았고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연구자들은 서구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본 기업 내부의 독특한 시스템에서 찾아내었다. 연공서열제, 장기고용제(중신고용제),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둔 안정적 노사관계는 독특한 산업조직과 아울러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본의 노동조직과 산업조직에 바탕을 둔 일본적 경영 시스템에 대한 후발자인 한국의 관심이 높은 것은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일본적 경영 연구에는 문화/역사적 측면이나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학문적 해석보다는 현재 기업경영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하는가, 또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극히 현실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 버블경제의 해체 이후, 10여 년에 걸친 장기불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오히려 기존의 일본적 경영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내부에서도 연공서열에 바탕을 둔 장기고용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전체적인 임금체계가 능력중시의 임금체제로 변화하고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시장의 유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일본적 경영의 구성요소가 오히려 유동성을 제약하여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구도 점차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한 실용적인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노동조직 및 산업조직의 개혁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일본 연구의 세 번째 특징은 한일 양국간의 경제적 현안인 양국간의 무역 역조문제에 연구의 중심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양대 자본주의 국가에의 전면적인 의존, 다시 말하면 한국 자본주의의 대외의존의 심화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의 완성을 통해 달성되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국이 본격적인 고도성장기에 놓여 있었던 1960, 70년대를 돌이켜 보자. 수출 시장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을 보면, 1960년부터 1979년까지의 누계수출액 639억 7천 800만 달러 중, 대일본 수출이 153억 200만 달러로 23.9%, 대미국 수출이 207억 1000만 달러로 32.4%, 두 나라가 총 수출의 56.3%를 차지한다. 수입액을 보면 같은 기간 누계수입액 876억 7천만 달러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320억 5천 4백만 달러로 36.6%,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14억 5천 600만 달러로 24.5%, 두 나라가 총

수입액의 61.1%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미국 및 일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다르다.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누계 무역 적자액 236억 9천2백만 달러 중, 대일 적자액은 167억 5천 2백만 달러로 70.7%에 달하는 반면, 대미적자는 7억 4천6백만달러로 3%에 지나지 않는다. 대미 무역적자는 1960년대의 만성적인 적자 기조에서 1970년 중반 이후 흑자기조로 들어선 반면, 대일무역은 지금까지도 적자기조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무역에서의 미일 절대 의존을 통한 대외의존의 심화는 무역구조의 질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미 수출을 위한 생산에 요구되는 원자재 및 핵심적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값싼 임금을 이용하여 가공·조립한 다음, 완제품 혹은 일부 부품을 생산, 수출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전제적으로 '국제적 하청생산'의 틀에 얽매이게 되었다. 공업 제품수출전략은 필연적으로 수출 공업품의 원자재 등의 수입 증가를 유발시켜 수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수입이 늘어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낳는 주범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의 완성이 대외의존적 구조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국민경제의 완성이라고 할 때, 대일 무역역조문제로부터의 탈피가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식은 아주 다양하며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에서 허덕이던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 문제를 상기시켜준다. 일본은 만성적인 대미 무역흑자는 양국 기업간의 국제경쟁력의 격차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일본 엔화의 저평가, 일본내의 비관세 장벽이라는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차별적 관행 및 제도 때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각은 우리의 연구 경향에도 그대로 답습되어 있다. 일본의 독특한 계열 거래나 장기적 거래 관행은 외국 제품의 일본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의 주범이고 따라서 비관세 장벽의 철폐나 완화가말로 한일 무역역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중심은 대일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결단, 다시 말하면 한국 제품의 수입량을 늘리기 위한 특혜관세

의 확대나 정책적 구입량의 확대, 대일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수입 다변화 조치 등과 같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에 바탕을 둔 단기적 처방책과는 달리 대일무역역조 문제를 좀 더 구조적 문제에서 접근하려는 시점도 적지 않았다. 한국의 고도성장=경제적 성공은 대일 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자기 재생산의 중요한 한 기동축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대일 무역 역조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일 무역 역조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쟁점은 최근에 와서 다소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며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냉전 질서의 해체 후, 경제 개방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세계적 확산 하에서도 지역경제권의 블록화가 다른 한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사안별 쟁점별 경제협력이나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협력으로 바꾸려는 흐름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한일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생산/무역/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시켜 양국의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려는 최근의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누어지지만 한일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역거래 중심의 기존의 한일 경제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 3. 새로운 경향과 앞으로의 전망

한국의 경제·경영분야 일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로 기존의 냉전체제 하의 국가 주도형 발전전략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일본 경제의 발전과정을 실용적인 모델로 간주해왔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1960년대 이후 두 번의 석유 위기와 1985년 이후의 급속한 엔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구가해 세계 자본주의의 모범생으로 찬사를 받아 왔던 일본 경제가 1990년대 버블 경제 해체 이후 장기불황 상태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발전모델로

서의 매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국가 주도형 발전전략의 모델로서의 효용가치가 상실되면서 선진국 따라 잡기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되었던 일본 경제·경영 연구 경향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실용적인 정책 교훈 찾기의 기존의 일본 연구 경향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일본 연구는 일대 위기와 전환기를 맞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위에서 밝힌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경영분야 일본 연구의 전통적인 단골 주제인 무역역조/산업정책/일본적 경영 문제와 아울러서 최근에 특히 양적으로 많아진 것이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연구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국면이 정착되고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기업의 동남 아시아 및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남 아시아 시장을 둘러싼 한일 기업간의 경쟁 혹은 상호보완이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기존의 일본 기업 해외진출 연구가 주로 일본 기업의 한국 유치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던 것이 비해 적지 않은 변화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경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째는 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종속/지배/경쟁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양국 경제 관계를 실질적인 상생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면서 이를 미국 중심의 시장지상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지역적 방어벽의 구축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담아내려는 연구 경향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움직임이나 일본의 아시아 통화기금(AMF) 구상과 같이 지역간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한편에서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자주적 대응의 일환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자본주의의 신패권주의의 흐름으로 파악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 대상이지만, 기존의 무역 거래를 중심으로 한 한일경제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각각 전후기지와 병참기지라는 세계적 반공체제의 하위 편대에 속해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냉전형 발전' 전략이 1990년대에 붕괴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아시아를 둘러싼 새로운 질서 구축이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새로운 중심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와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일본 자본주의의 신패권주의 전략으로 이해할 것인지, 미국 주도의 냉전 해체 이후의 아시아의 내재적 횡적 네트워크 형성의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를 가능할 수 있는 좋은 예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이다. 사실 아시아 금융 위기는 나라에 따라 그 원인이 다소 다르지만 일부 지역은 일본 금융자본의 급격한 자금회수가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의 일본 연구가 전후 세대인 40대의 일본 학위 취득자를 중심으로 한일비교나 한일관계에만 집중되었던 한정된 분야에서 벗어나 일본을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경제/경영분야 연구가 타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학제간 연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선택적/기능적/교훈적 일본 연구를 대신하여 독립적 일본 연구, 즉 지역학 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학/경영학 연구의 한 분야로서의 일본 경제/경영 연구가 아니라 일본 연구의 한 분야로서 일본 경제·경영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적인 일본 연구가 반드시 기존의 실용적인 한일관계나 교훈 찾기 중심의 한일비교 중심의 연구와 일선을 긋고 새로운 일본연구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한일비교나 한일관계를 통한 일본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연구 및 일본내의 일본 연구에서 무시/경시되기 쉬운 연구 시각과 내용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 경향의 변화에 기존의 연구 전통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 문 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schpark@sias.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